

---

#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

2020. 12.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차 례

##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2
2. 조사 개요 .....	2
3. 조사 내용 .....	2
4. 응답기업 특성 .....	3

## II 조사 결과

1. 1주 총 근로시간의 주52시간 초과 여부 .....	5
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 인지 여부 .....	6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 상태 .....	7
4. 관공서 공휴일(15일) 운영 형태 .....	8
5.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 쉬는날로 운영 가능 여부 .....	9
5-1.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	10
6.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예상) .....	11
7. 연차휴가 전체 사용 여부 .....	12
8.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13
9. 휴일·휴가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의견 .....	14

## 제1장 조사개요

---

## 1. 조사목적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중소기업에 확대됨에 따른 영향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2.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중소기업
2) 표본수	450개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복합조사(전화, 이메일, 팩스 등)
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48\%P$
5) 조사기간	2020. 11. 27.(수) ~ 2020. 12. 3.(목)

## 3.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명 / 응답자 연락처</li> <li>■ 상시 근로자수</li> <li>■ 소재지</li> <li>■ 업종</li> <li>■ 납품여부</li> </ul>
설문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주25시간 근로시간 초과 여부</li> <li>■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기업 확대 인지 여부</li> <li>■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 상태</li> <li>■ 관공서 공휴일(15일) 운영 형태</li> <li>■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 쉬는날로 운영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li> </ul> </li> <li>■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예상)</li> <li>■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증가일 경우)</li> <li>■ 연차휴가 전체 사용 여부</li> <li>■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li> <li>■ 자유의견</li> </ul>

#### 4.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450개 응답자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사례수(개)	비율(%)
전 체		(450)	100.0
지역	수도권	(270)	60.0
	비수도권	(180)	40.0
업종	제조업	(315)	70.0
	비제조업	(135)	30.0
상시 근로자 수	30~50인 미만	(182)	40.4
	50~100인 미만	(151)	33.6
	100인 이상	(117)	26.0
납품 여부	납품업체	(323)	71.8
	비납품업체	(127)	28.2

## 제2장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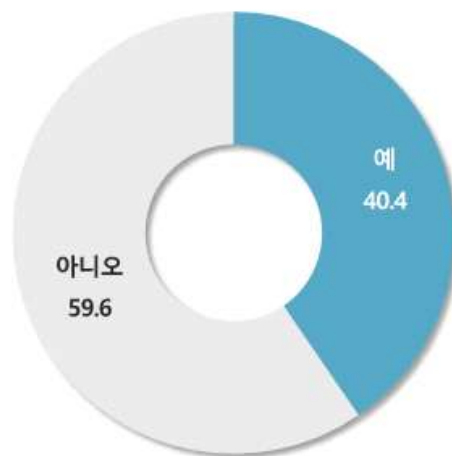
---

## 1. 1주 총 근로시간의 주52시간 초과 여부

- 1인당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은 40.4%이며,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59.6%로 절반 이상임
- 상시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주52시간 초과근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납품여부별 결과, 비납품업체가 납품업체 대비 주52시간 초과근무 비율이 높음

[그림 1] 1주 총 근로시간의 주52시간 초과 여부

(Base : 전체(n=450), 단위 : %)



[표 1] 1주 총 근로시간의 주52시간 초과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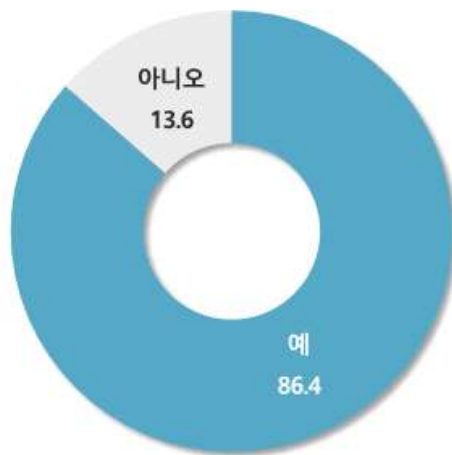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50)	40.4	59.6
지역	수도권	(270)	40.7	59.3
	비수도권	(180)	40.0	60.0
업종	제조업	(315)	37.5	62.5
	비제조업	(135)	47.4	52.6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39.0	61.0
	50~100인 미만	(151)	39.7	60.3
	100인 이상	(117)	43.6	56.4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37.8	62.2
	비납품업체	(127)	47.2	52.8

## 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 인지 여부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이 86.4%, 모르는 기업이 13.6%로 나타남
- 납품여부별 결과, 비납품업체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에 대해 91.3%가 알고 있어 납품업체 대비 인지율이 높음

[그림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인지 여부

(Base : 전체(n=450), 단위 : %)



[표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50)	86.4	13.6
지역	수도권	(270)	86.7	13.3
	비수도권	(180)	86.1	13.9
업종	제조업	(315)	85.1	14.9
	비제조업	(135)	89.6	10.4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86.3	13.7
	50~100인 미만	(151)	86.1	13.9
	100인 이상	(117)	87.2	12.8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84.5	15.5
	비납품업체	(127)	91.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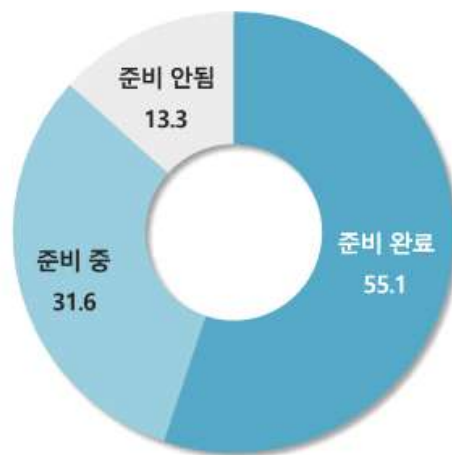


###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 상태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 55.1%, 준비 중인 기업이 31.6%, 준비가 안된 기업이 13.3%로 나타남
- 지역별 결과, 수도권은 60.0%가 준비 된 반면, 비수도권은 47.8%가 준비 완료됨
- 상시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준비 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 상태

(Base : 전체(n=450), 단위 : %)



[표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준비 상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준비 안됨	준비 중	준비 완료
전 체		(450)	13.3	31.6	55.1
지역	수도권	(270)	8.9	31.1	60.0
	비수도권	(180)	20.0	32.2	47.8
업종	제조업	(315)	14.6	32.1	53.3
	비제조업	(135)	10.4	30.4	59.3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19.2	33.5	47.3
	50~100인 미만	(151)	13.2	33.8	53.0
	100인 이상	(117)	4.3	25.6	70.1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15.2	31.9	52.9
	비납품업체	(127)	8.7	30.7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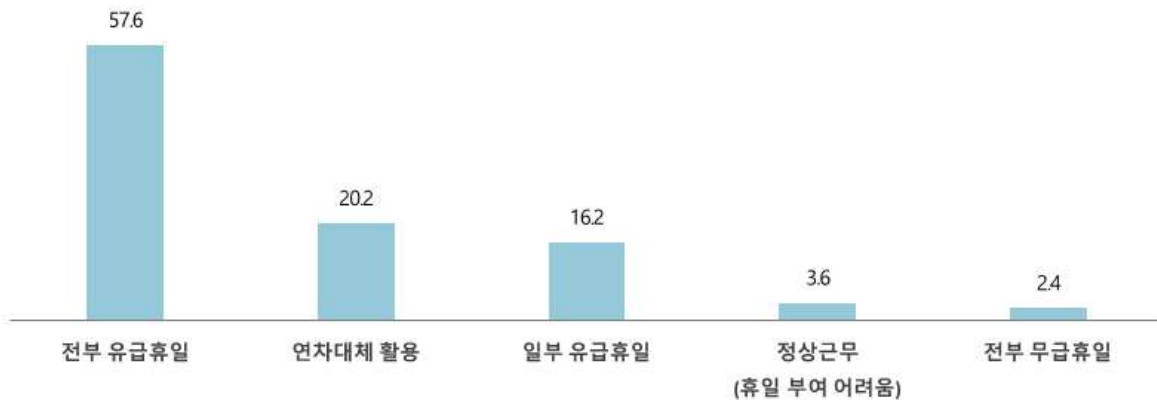
#### 4. 관공서 공휴일(15일) 운영 형태

- 현재 관공서 공휴일(15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차대체\* 활용’(20.2%), ‘일부 유급휴일’(16.2%)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15일)을 ‘연차대체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 22.5%, 2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차대체 :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취급

[그림 4] 관공서 공휴일(15일) 운영 형태

(Base : 전체(n=450), 단위 : %)



[표 5] 관공서 공휴일(15일) 운영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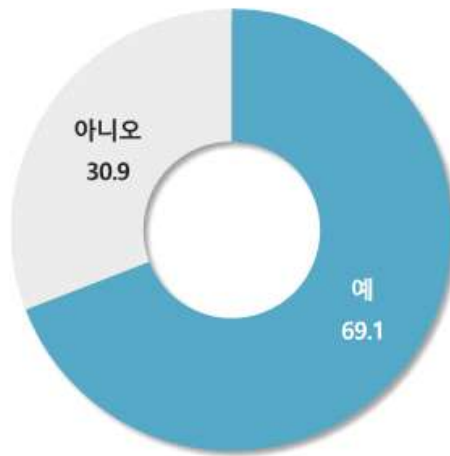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부 유급휴일	연차대체 활용	일부 유급휴일	정상근무	전부 무급휴일
전 체		(450)	57.6	20.2	16.2	3.6	2.4
지역	수도권	(270)	65.2	18.9	12.2	1.9	1.9
	비수도권	(180)	46.1	22.2	22.2	6.1	3.3
업종	제조업	(315)	52.1	22.5	18.4	3.8	3.2
	비제조업	(135)	70.4	14.8	11.1	3.0	0.7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44.0	25.8	23.6	3.8	2.7
	50~100인 미만	(151)	60.9	19.2	13.2	4.0	2.6
	100인 이상	(117)	74.4	12.8	8.5	2.6	1.7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54.2	21.7	18.6	3.4	2.2
	비납품업체	(127)	66.1	16.5	10.2	3.9	3.1

## 5.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 쉬는 날로 운영 가능 여부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은 69.1%, 불가능한 기업은 30.9%로 나타남
- 수도권은 77.7%가 쉬는 것이 가능하나, 비수도권은 60.8%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쉬는날로 운영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 쉬는날로 운영 가능 여부

(Base : 전체(n=191), 단위 : %)



[표 6]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15일) 전부 쉬는날로 운영 가능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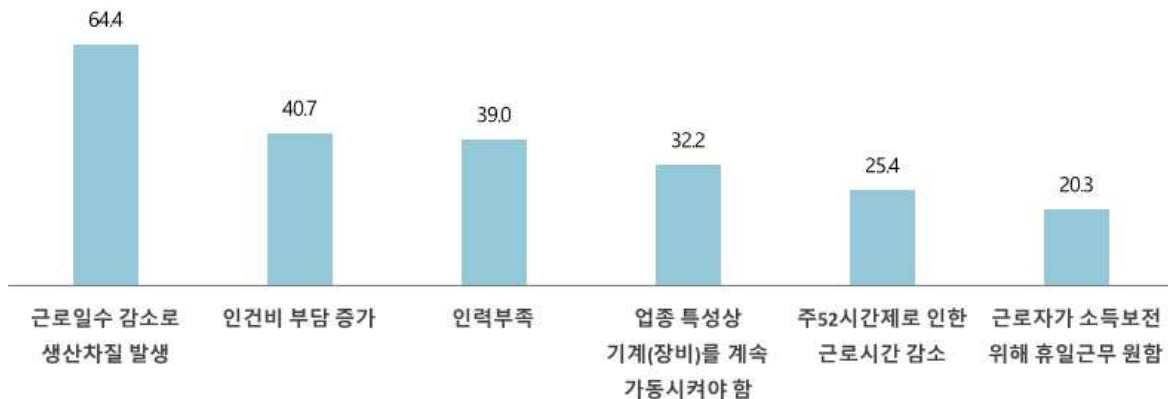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91)	69.1	30.9
지역	수도권	(94)	77.7	22.3
	비수도권	(97)	60.8	39.2
업종	제조업	(151)	66.9	33.1
	비제조업	(40)	77.5	22.5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02)	64.7	35.3
	50~100인 미만	(59)	69.5	30.5
	100인 이상	(30)	83.3	16.7
납품여부	납품업체	(148)	68.2	31.8
	비납품업체	(43)	72.1	27.9

### 5-1.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 부족’(39.0%),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시켜야 함’(32.2%)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소재, 비제조업, 100인 이상, 비납품업체 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을 1순위 이유로 꼽음

[그림 6]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Base :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기업(n=59), 단위 : %, 복수응답)



[표 7]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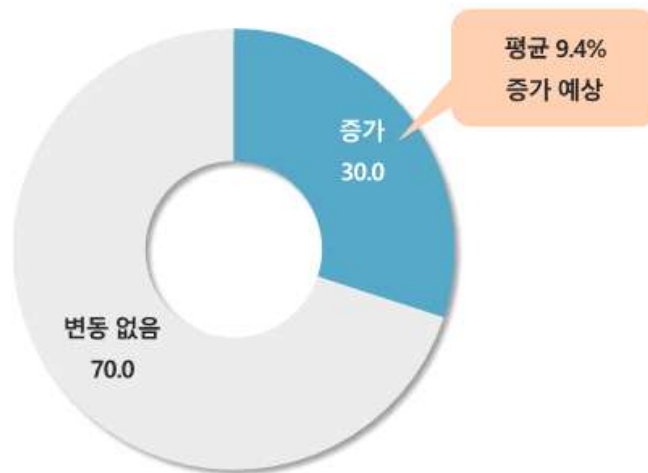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	인건비 부담 증가	인력부족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시켜야 함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근로자가 소득보전 위해 휴일근무 원함	
전체	(59)	64.4	40.7	39.0	32.2	25.4	20.3	
지역	수도권	(21)	52.4	38.1	61.9	33.3	33.3	28.6
	비수도권	(38)	71.1	42.1	26.3	31.6	21.1	15.8
업종	제조업	(50)	72.0	46.0	38.0	32.0	26.0	24.0
	비제조업	(9)	22.2	11.1	44.4	33.3	22.2	0.0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36)	55.6	41.7	36.1	36.1	25.0	22.2
	50~100인 미만	(18)	88.9	44.4	38.9	27.8	33.3	16.7
	100인 이상	(5)	40.0	20.0	60.0	20.0	0.0	20.0
납품여부	납품업체	(47)	70.2	46.8	36.2	38.3	27.7	23.4
	비납품업체	(12)	41.7	16.7	50.0	8.3	16.7	8.3

## 6.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예상)

-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은 변동 없다는 의견이 70.0%,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30.0%로 나타남
-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수도권의 경우 41.1%가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0~100인 미만 기업은 29.1%가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평균 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7]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예상)

(Base : 전체(n=450), 증가 예상 기업(n=135), 단위 : %)



[표 8]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 변화(예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동 없음	사례수	예상 증가율
전 체		(450)	30.0	70.0	(135)	9.4
지역	수도권	(270)	22.6	77.4	(61)	10.7
	비수도권	(180)	41.1	58.9	(74)	8.4
업종	제조업	(315)	36.2	63.8	(114)	9.6
	비제조업	(135)	15.6	84.4	(21)	8.2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37.4	62.6	(68)	8.5
	50~100인 미만	(151)	29.1	70.9	(44)	11.6
	100인 이상	(117)	19.7	80.3	(23)	8.0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34.4	65.6	(111)	9.5
	비납품업체	(127)	18.9	81.1	(24)	8.8

## 7. 연차휴가 전체 사용 여부

-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지 않고 모두 사용하는 기업이 50.0%, 모두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50.0%로 동일한 비율로 조사됨
- 수도권외의 경우 57.4%가 모두 사용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8.9%만이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함
- 제조업은 45.1%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61.5%가 모두 사용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음

[그림 8] 연차휴가 전체 사용 여부

(Base : 전체(n=450), 단위 : %)



[표 9] 연차휴가 전체 사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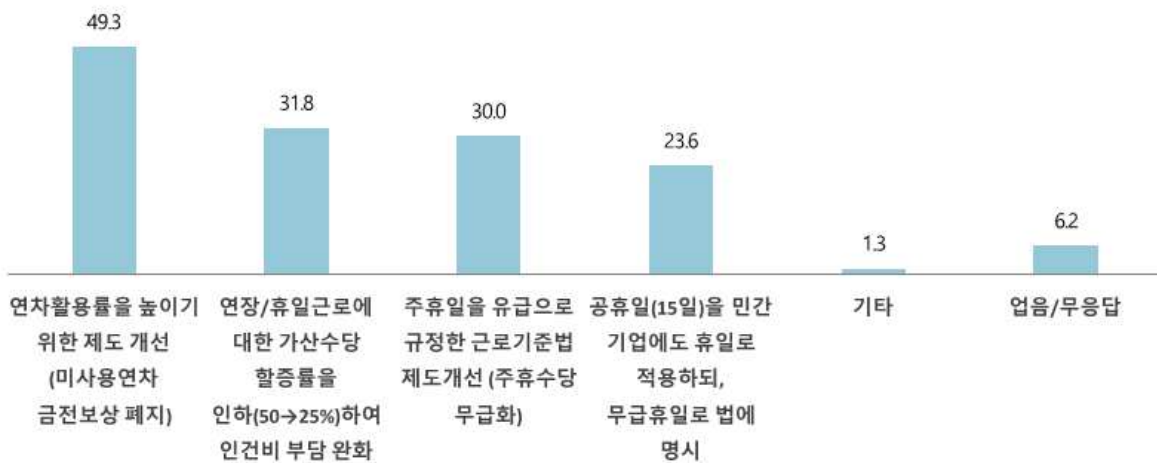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50)	50.0	50.0
지역	수도권	(270)	57.4	42.6
	비수도권	(180)	38.9	61.1
업종	제조업	(315)	45.1	54.9
	비제조업	(135)	61.5	38.5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51.6	48.4
	50~100인 미만	(151)	49.7	50.3
	100인 이상	(117)	47.9	52.1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46.1	53.9
	비납품업체	(127)	59.8	40.2

## 8.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차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49.3%)이며, 이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인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31.8%),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도 개선(주휴수당 무급화)’(30.0%) 순으로 조사됨

[그림 9]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

(Base : 전체(n=450), 단위 : %, 복수응답)



[표 10]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연차활용률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인하(50→25%)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도 개선 (주휴수당 무급화)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휴일로 적용하되,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	기타	없음/무응답	
전체	(450)	49.3	31.8	30.0	23.6	1.3	6.2	
지역	수도권	(270)	48.5	30.7	26.7	21.9	0.7	8.1
	비수도권	(180)	50.6	33.3	35.0	26.1	2.2	3.3
업종	제조업	(315)	50.5	32.7	30.5	24.4	1.6	4.8
	비제조업	(135)	46.7	29.6	28.9	21.5	0.7	9.6
상시 근로자수	30~50인 미만	(182)	47.3	26.9	32.4	25.8	1.6	6.0
	50~100인 미만	(151)	55.0	33.8	29.8	25.2	1.3	6.0
	100인 이상	(117)	45.3	36.8	26.5	17.9	0.9	6.8
납품여부	납품업체	(323)	51.4	31.9	31.6	24.1	1.5	5.6
	비납품업체	(127)	44.1	31.5	26.0	22.0	0.8	7.9

## 9. 휴일·휴가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의견

[표 11] 휴일·휴가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의견

내용	비율(%)
인건비 상승 부담이 예상되어서	3.6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바꿨으면	1.8
유예기간을 여유 있게 줬으면	1.1
형평성을 맞췄으면	0.9
1년미만인 경우 기존대로 삭제 조항이 있었으면	0.9
제조납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서	0.7
휴가일수 증가로 중소기업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0.7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제도 도입을 완화했으면	0.7
미사용연차 금전 보상 지원했으면	0.7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0.7
연차축진제를 폐지했으면	0.4
관공서 휴무를 홍보했으면	0.4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무로 쓸 수 있었으면	0.4
추가 수당 없이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줬으면	0.4
대체공휴일 조건을 확대했으면	0.4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했으면	0.4
노동관련 기준을 대기업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0.2
외국인 쿼터를 올렸으면	0.2
긴급 발주 시 대안이 없어서	0.2
사무직과 생산직의 입장차가 있어서	0.2
기존 제도 준수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0.2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처리했으면	0.2
오너들의 인식을 개선했으면	0.2
납품 대금을 올려줬으면	0.2
확실한 기준을 내놨으면	0.2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했으면	0.2
퇴사 시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개선했으면	0.2
휴일에 강제로 연차 쓰게 하는 것을 제재했으면	0.2
1년 미만 사원 연차 숫자를 개선했으면	0.2
기업 감시를 했으면	0.2
사업규모 고려한 연장/휴일근로 할증을 개선했으면	0.2
포괄임금제의 존속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으면	0.2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마련해줬으면	0.2
최저임금 개선했으면	0.2
공휴일의 유무급을 민간기업 자율에 맡겼으면	0.2
현행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줬으면	0.2
연차부여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0.2
정부에서 기업 자율에 맡겼으면	0.2
공휴일을 무급 휴일로 적용했으면	0.2

\* 없음, 무응답 제외